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 계획' 보고

“과학기술강국 건설로 선진일류국가 도약”

- 기초연구 강화와 인력운용 효율화 초점

- R&D예산 2012년까지 16조 원으로 증액

글 | 김은표 _ 매일경제신문 기자 paulkim@mk.co.kr

지난 3월 20일 대덕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다. 특히 교육부와 통폐합으로 과학기술 부문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 과학기술계의 관심이 쏠렸다.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용적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 주로 반영됐다. 이에 맞춰 교과부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량을 강화,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내용을 대거 포함시켰다.

다만 정부는 기업이나 대학, 특정 산업분야가 주도하기 어려운 기초원천기술 연구에 대한 배정 예산을 크게 늘린다는 기존 계획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 우주 극지 해양 원자력 등 장기간의 계획과 큰돈이 필요한 거대과학 연구에는 정부가 앞장서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강국 최종목표는 신산업창출

교과부는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향후 국정운영의 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4단계 전략으로 과학기술 국가전략 수립, 대학과 연구기관 핵심역량 강화, 연구지원 허부구조 강화, 과학기술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우선 국가전략 수립과 관련해서는 2008년 기준 10조8천억 원 수준인 국가 연구개발(R&D) 투자규모를 2012년까지 16조2천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금액은 2012년 예상 GDP 대비 5% 수준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과도 일치한다. 특히 증액되는 예산은 유비쿼터스 기술, 로봇, 미래형자동차 등 신기술 융합이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부총리가 과기장관회의를 통해 부처간 조정기능을 발휘하던 과거의 시스템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교과부 장관이 부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R&D 예산을 배분하는 컨트롤 타워로 부상하게 됐다. 또 업무의 조정 기능이나 조직 편제를 볼 때 국과위의 운영위원장을 맡는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주력기간산업기술, 거대기술, 국가주도기술, 첨단융복합기술, 사회기반기술 등 5개 전문위원회를 총괄하면서 교과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투자전략 수립과 예산배분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5개의 전문위원회를 수요자인 과학기술인 중심으로 구성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산학연 수요자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과부의 대통령 보고 내용 최종 목표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은 부정적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이나 고용 창출, 신산업 창출 등 MB정부 과학기술정책 최종목표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오히려 과학자들은 단기적인 연구나 성과에만 집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도연 교육과기부 장관은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수단이라는 생각은 과거의 패러다임”이라며



김도연 장관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를 하고있다 (2008년 3월 20일, 사진제공=연합뉴스).

“과학기술은 국가의 격을 상징하는 동시에 생존을 좌우하는 절대 명제”라는 생각을 수차례 밝혀왔다.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아는 학자출신 장관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일부 청와대 정책 당국자와의 인식 격차가 어떻게 조화될 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인력부문 효율화 주목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폐합한 취지에 따라 정부는 양측을 대표하는 주요 연구기관인 대학과 출연기관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대전에 많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있지만 대학 민간연구소 기업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좀 더 혁신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연구를 잘하고 성과를 내는 조직에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양 기관의 벽을 허물고 공동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로 교육공무원법과 출연연구원육성법의 손질에 나선다. 양 법령에 인력 상호파견의 근거규정을 만들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협업을 통해 기초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했던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출연기관이 보다 질 높고 실용적인 성과를 내놔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출연기관과 대학간 인력교류나 공동연구가 형식적인 단계를 넘어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이 집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의 통폐합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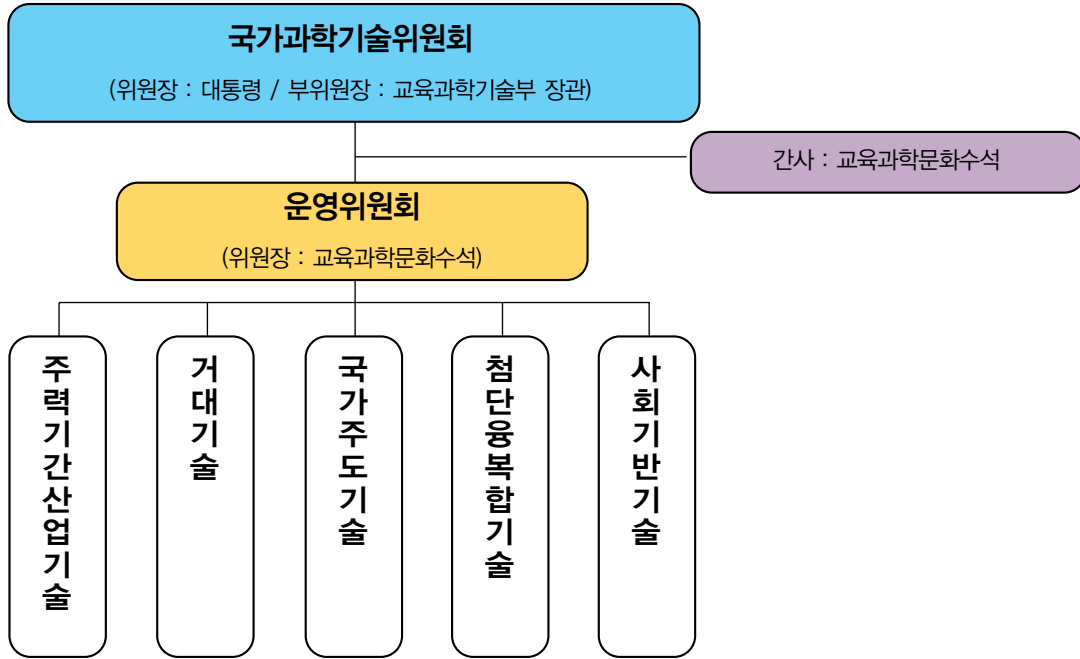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계획(잠정)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투자액	10.8조원	11.9조원	13.3조원	14.7조원	16.2조원

정부의 기초원천연구 투자계획(잠정)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기초원천 투자	2.8조원	3.7조원	4.9조원	6.2조원	8.1조원
비중(%)	25.6	30.6	36.0	42.4	50.0

국가 과학기술정책 새 운영체계



어지는 조치다. 대학의 인문사회와 이공계 분야를 지원해온 진흥재단과 이공계 분야를 지원해온 과학재단을 통폐합해 국가의 연구지원 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학재단(NSF)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두 조직의 통합과 관련한 입법을 하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 분야에 대한 예산을 4년 뒤까지 10배가량 늘리는 것도 눈에 띈다. 2008년 현재 343억 원 수준인 과학인재 양성 예산을 2012년까지 3천억 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면 '과학신동-영재교육원-영재학교-대통령과학장학생사업'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부산에 있는 과학영재학교를 지역별로 설립해 4년 뒤까지 개교 학교수를 4개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 개교예정인 울산과학기술대를 과학기술 인재가 모이는 융·복합인재 양성기관으로 집중 육성한다. 또 국가석좌교수와 연구원제를 도입해 우수 인재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매년 200명씩 총 1천명의 과학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초원천·거대과학 연구 집중

약 11조원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 중 25%에 불과한 기초원천

연구의 투자비중이 50%까지 늘어나는 것도 주목된다. 민간의 투자와 중복 부문을 최소화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의 뒷받침하는 원천기술 확보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2008년 기준 2조8천억 원 수준인 기초원천투자 연구비를 2012년까지 8조1천억 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2012년 국가 R&D 전체 예산이 16조2천억 원인 것을 생각하면 약 절반의 예산을 기초원천 연구에 투자하는 셈이다.

이공계 교수와 연구원들의 수요에 비해 지원이 부족했던 개인 기초연구 부문 예산도 4년 사이에 4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이 부문 예산규모는 3천704억 원였지만 2012년에는 1조5천억 원까지 증가한다. 특히 연구실적이 없어 연구예산을 타기 어려운 20대와 30대 신진연구자들의 연구비 수혜비율이 2006년 기준 18.6%에서 2012년에는 25%까지 늘어난다.

또 우주인 배출과 우주발사체 자력발사 등 내용을 담고 있는 우주개발 분야, 핵융합연구, 차세대 원자로개발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거대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예산 집행도 차질 없이 집행된다.

연구자 사기진작 배려

한편 출연연구원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교과부는 전체 인건비의 38%만 제공해온 '프로젝트 연동 예산시스템(PBS)'을 개선, 인건비의 70%를 기본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강국 건설 위한 2008년 입법 추진 계획

반기별	법령명	주요 내용	추진일정
상반기	국립대학법인화법 제정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효율적 경영체제 확립	2008. 6
하반기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대학의 외부평가인증기관 지정 기준, 절차, 방법 등 규정	2008. 8
	학술진흥및학자급대출신옹호증등에 관한법률/한국과학재단법 개정 (가칭)국가학술연구재단법 제정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 통합	2008. 9
	교육공무원법/과학기술분야정부 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 개정	교수·연구원의 상호파견, 겸임, 고용휴직 활성화 근거규정 마련	2008. 9
	(가칭)국립대학재정운영에관한특별법 제정	대학회계제도 도입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2008. 10

나머지 30%는 출연연구원간 경쟁을 통해 확보하도록 해 안정과 경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계획이다. 평가시스템도 관리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바뀐다. 연구 성과 부문의 평가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보다 장기적인 연구 프로젝트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중복감사를 피하고 연구자들의 시간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수행부처의 자체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특히 출연연구원의 경영과 관리 메뉴얼을 배포해 각 연구원의 자율경영을 보장한다. 과기부총리가 확정했던 과학기술인 연금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200억 원씩 5년간 1천억 원을 추가 조성한다. 이 작업이 끝나면 과학기술인공제조합은 2천억 원 규모의 정부출연금을 확보하게 된다.

대학 역시 연구기반 확충 계획의 수혜를 입게 된다. 정부 연구비 중 간접경비 지원규모를 과제당 2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2008년부터 5년간 매년 1천250억 원을 포괄적 보조금으로 분류해 연구성과가 높은 대학이나 연구실에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선행 연구성과의 피인용지수와 최고등급 학술지 게재성과 등에 따라 국책연구과제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올 9월부터 도입, 연구비를 받는 대학 조직의 긴장감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날로 학력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초중등 분야 수학과 과학 교육의 개선도 이루어진다. '첨단과학교사연수센터'를 설치해 학생들과의 접점에서 있는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 3학년용 차세대 교과서도 개발에도 나선다. 특히 내년에 완공되는 국립과천과학관과 2011년 건립예정인 대구과학관과 광주과학관을 활용해 생활과학교실과 견학프로그램도 크게 늘린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아 아직 사업추진 기본개념 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상목 교과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대덕연구단지 인근에 기초과학연구에 필요한 가속기를 설치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을 유치하는 등 약 3조5000억원을 투자한다는 청사진만 마련된 상태"라며 "성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올 한해 과학기술계와 기업, 지자체, 대학 등의 의견을 잘 수렴해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SD**



글쓴이는 1997년 매일경제신문 입사 후 중소기업부, 사회부, 증권부, 국제부 등을 거쳐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대덕연구단지, 대학 등 과학기술계 취재를 담당하고 있다.